

신용카드리뷰

The Credit Card Review

Vol 17-1(2023년 3월)

우리나라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 규제에 관한 연구

최 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부교수



우리나라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 규제에 관한 연구*

최 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부교수

〈Abstract〉

국내 대부금융시장에는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동 규제는 시장의 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유지하는 동안 줄곧 강화되어 왔다. 최고금리는 계속 인하를 거듭하여 마지막으로 2021년 7월에 종전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 것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도 자연히 상승하게 되는데 최고금리 규제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미치는 대부금융 시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상한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금융사업자들은 대출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을 받게 되고 자금 수요자들도 이 시장에서 대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부금융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며 그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부금융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준금리 인상 등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른 적정 금리 수준을 예측해 보았다. 예컨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3.0%라면 대부금융 시장 금리 예측치의 최솟값이 26.7%로 나타나 현행 최고금리 20.0%를 훨씬 웃돌고 있다. 따라서 최고금리의 인하는 금융포용의 차원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좋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시장을 지나치게 통제하여 오히려 이 시장을 통한 대출 기회를 감소시켜 취약계층 대출 수요자들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보다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최고금리 수준이 현행 시장 상황과 연동하여 조정되도록 하거나 시장을 배려하여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핵심 단어: 대부금융시장, 최고금리, 금융포용, 대부업, 신용대출

* 이 논문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2022.11.15.)에서 발표된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순현관 1001호, Tel: 02) 2077-7958, E-mail: choichul@sookmyung.ac.kr

I. 서론

가격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여 시장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가격 규제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장 규제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우리나라 대부금융시장은 바로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 속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과 동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금리 규제에 관한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다수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지적되어 왔듯이 이러한 규제가 시장에 초래하는 비효율과 부정적인 영향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최고금리 인하 조치가 계속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다. 물론 그 취지는 저신용 취약계층 대출 수요자들의 이자 비용을 경감시켜 금융포용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제도권 대출시장의 가장자리에 있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대부금융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적정 금리 수준보다 낮은 최고금리에서는 공급의 법칙에 따라 대출 공급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신용대출을 중단하거나 영업을 포기하는 대부금융사업자가 속출함으로써 대부금융시장의 공급 자체도 위축되어 그나마도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자들이 제도권 대출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길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금융시장을 넘어서면 그야말로 사금융의 영역이고 불법적인 고금리와 거래 조건 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이는 이론적 추론만이 아니라 그동안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 대부금융시장의 대출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온 것을 금융감독원이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대부금융시장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7월부터는 최고금리가 종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었는데 2021년 말 대부금융시장에서 신용대출 규모는 7조 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79억 원 감소하였으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발표되기 전인 2019년 말의 8조 9,109억 원과 비교하면 1조 8,811억 원(약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전 최고금리 인하 시점은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의 확장 재정과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던 때였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는 수요의 회복에 비해 공급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여파로 고도의 인플레이션을 맞이했고 이에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에 따라 금융시장마다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공급의 회복과 공급망 정상화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플레이션과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불황의 악순환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계 경제는 실질 소득의 감소로 인해 소비 지출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

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계일수록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비상 자금의 여유도 부족한 편이어서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가계의 대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에 따라 대부금융사업자의 대출 공급이 감소한다면 이는 시장에 더 크고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가 사라지고 시장 금리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최고금리의 인하 조치는 사실상 대부금융사업자에게 대출 영업을 포기하도록 만들 만큼의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시장의 붕괴로 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고금리 규제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대부금융시장의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이 시장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 등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른 적정 금리 수준을 예측해 봄으로써 최고금리 규제가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도 덧붙이고자 한다. 현재 대부금융시장이 당면한 상황에 대하여 정책 당국은 물론 시장 참가자들도 충분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향후 이 시장의 활성화와 지속 발전이 왜 필요한지를 검토해 볼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대부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의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대부금융시장은 제도권 대출시장과 사금융의 경계를 이루며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대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장임에도 이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중·고금리 대출시장의 활성화도 미흡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 대출시장 접근성이 제한되는 일종의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를 의미한다. 정부에서 한편으로는 정책금융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에 힘쓰고 있지만 그 재원에도 한계가 있으며 종종 정책금융과 복지의 경계가 모호해져 정책금융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대부금융시장이 전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록 미미할지라도 제도권 시장에 편입된 이후 오랜 시간을 거치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중·고금리 대출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적인 사금융과 구별 없이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는가 하면 정책 당국에서도 대부금융시장의 상대적 중요성에 걸맞게 관심과 역량을 기울이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정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취지가 대부금융시장 정책에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본 연구가 대부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유용한 참고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II.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는 대부금융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 시장이 금융포용에 기여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가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떤 제도나 규제가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입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고금리 인하 주장에 대해서도 과연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탐구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선 다른 대출 시장과 비교하여 대부금융시장의 경우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대출 수요자에 대해 독점력을 갖는 대부금융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비록 대출 금액은 적지만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 자금 수요인 셈이다. 아울러 대부금융사업자가 신용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출 수요자의 신용도에 부합하는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면 대부금융사업자와 대출 수요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사회후생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민환, 한재준, 2013).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대규 (2017)는 법적인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최고금리 규제 현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최고금리와 같은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으며 규제를 두더라도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박덕배 (2018)는 서민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순기능과 의의를 강조하면서 그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고 그동안 최고금리 인하 조치가 이러한 순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지적하였다.

미시경제학적 접근 방법으로 대부금융시장의 구조, 수요와 공급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도 특기할 만하다. 우선 강종구, 임호성 (2015)은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수요와 공급을 도출하였는데 수요 측면의 결정 요인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택가격 상승률, GDP 증가율이 포함되고, 공급 측면의 결정 요인으로는 콜금리, 자기자본비율, 신용위험이 포함된 모형을 이용하였다. 을 공급 측면의 결정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시장의 구조방정식 추정을 통해 각각 수요와 공급을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공급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때 금리의 변동폭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시장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구정한 외 (2016)에서 대부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대출 수요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이 매우 절실하다는 특성이 수요 곡선의 금리 탄력성에 반영되어 그 절댓값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즉 탄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도 일치하며, 최철 (2020)의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수요의 금리 탄력성의 절댓값이 공급의 금리 탄력성의 절댓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출시장의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므로 대출 금리가 시장의 균형 수준 이하로 결정된다는 신용할당 모형들(Hodgman, 1960; Jaffe & Russell, 1976; Stiglitz & Weiss, 1981)이 설득력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부금융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대부금융시장에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전통적인 수요·공급 모형을 통한 균형 분석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고금리의 인하로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소비자들이 대출 시장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홍희주, 김상봉 (2018)은 신용도별 신규 대출 거래자 수가 금리,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최고금리와 같은 설명 변수의 영향을 받는 회귀 모형을 상정하고 이를 추정한 결과 최고금리가 당시 27.9%에서 20%로 인하될 경우 비은행 권역에서만 약 49만 명(전체로는 약 84만 명)의 저신용 금융소비자들의 시장 배제, 즉 금융소외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이수진 (2018)은 대부금융사업자의 원가 금리를 자금 조달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상각비 등으로 구분하고 신용도별 손익분기점이 되는 금리를 추정하여 최고금리 인하 시 대부금융사업자가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대부금융시장 이용자들이 배제되는 규모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당시 27.9%였던 최고금리가 25%로 인하될 경우 대부금융시장을 이용하는 저신용 대출 거래자(약 86만 명)의 최소 11%, 20%로 인하 시에는 최소 76%가 시장에서 배제되므로 최고금리 인하 문제는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대출시장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최철 (2020)의 연구 모형에서 자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법인 대부금융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될 경우 약 3조 원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1인당 평균 대출 금액(559만 원)을 감안할 때 약 54만 명의 수요자가 대출을 받고자 해도 이 시장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서민금융연구원(2019)은 대부금융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대부금융사업자들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실제로 신규 신용대출 취급을 축소했으며 또한 1인당 평균 대출 금액도 감소했다는 응답 결과를 얻었다. 이는 대부금융사업자들이 보다 강화된 최고금리 규제 환경에서 이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출 승인율을 낮추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최고금리 규제가 시장 금리 수준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두기보다는 변동금리 방식처럼 시장의 지표 금리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김미루, 2022).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해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대부금융시장의 기본적 분석

대부금융시장의 주요 현황 파악과 기본적인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동 조사는 반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월 또는 분기 단위로까지 자료가 확보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이나마도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춘 조사 자료는 매우 드물고 대부금융시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통계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금융사업자로는 법인과 개인이 있으며, 법인의 경우 다시 자산을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의 법인과 100억 원 미만의 법인으로 나뉜다. 이 연구에서는 등록 사업자로서 자산 1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T1(Tier 1), 자산 100억 원 미만의 법인을 T2(Tier 2), 개인을 T3(Tier 3)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아래의 <표 1>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개 연도 말 잔액을 기준으로 대부금융시장의 대출 규모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T1 그룹이 전체 대부금융시장 신용대출의 90%를 초과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에 있어서도 T1 그룹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편이다. 2021년 말을 기준으로 T1 그룹의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각각 전체의 대부금융시장의 91.1%와 62.6%를 기록하고 있다.

<표 1> 대부금융시장의 대출 규모와 비중

단위: 십억 원, %

연도	전체			T1			T2			T3		
	신용	담보	계	신용	담보	계	신용	담보	계	신용	담보	계
2021	7,029 (100.0)	7,614 (100.0)	14,643 (100.0)	6,404 (91.1)	4,766 (62.6)	11,170 (76.3)	481 (6.8)	2,083 (27.4)	2,564 (17.5)	144 (2.0)	765 (10.0)	909 (6.2)
2020	7,367 (100.0)	7,168 (100.0)	14,535 (100.0)	6,804 (92.4)	4,612 (64.3)	11,416 (78.5)	394 (5.3)	1,942 (27.1)	2,336 (16.1)	169 (2.3)	614 (8.6)	783 (5.4)
2019	8,911 (100.0)	7,006 (100.0)	15,917 (100.0)	8,421 (94.5)	4,699 (67.1)	13,120 (82.4)	357 (4.0)	1,706 (24.4)	2,063 (13.0)	133 (1.5)	601 (8.6)	734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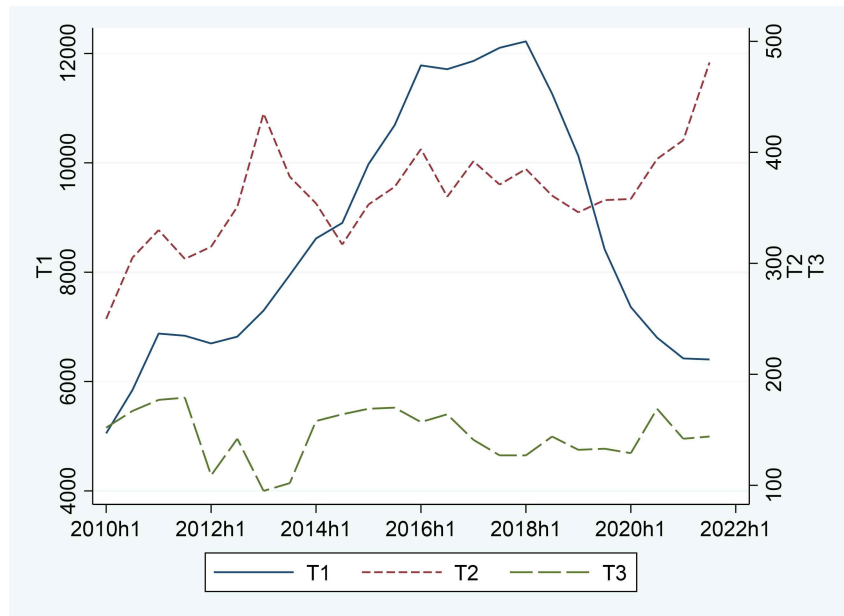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각 그룹의 비중

2020년 말과 2021년 말에는 전체적으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그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9년 말에는 신용대출이 담보대출보다 약 1조 9천

억 원 이상 컸고 2021년 말에는 담보대출이 신용대출을 넘어서고 있다. 신용대출은 그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담보대출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룹별로는 T1의 경우 여전히 신용대출 규모가 담보대출에 비해 크기는 하지만 2019년 말에 신용대출이 담보대출의 약 1.8배이던 것이 2020년 말에는 약 1.5배, 그리고 2021년 말에는 약 1.3배로 상대적 규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와는 달리 T2와 T3의 경우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의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1>을 통해서도 특히 2018년 이후 T1의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그림 2>에서는 2016년 이후 대부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담보대출 증가 추세를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두드러진 추세의 변동은 2016년 3월과 2018년 2월에 있었던 최고금리 인하 조치(각각 연 34.9%에서 연 24.9%로, 연 24.9%에서 연 24%로 인하)와도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그룹별(T1/T2/T3) 신용대출 규모 변동 추이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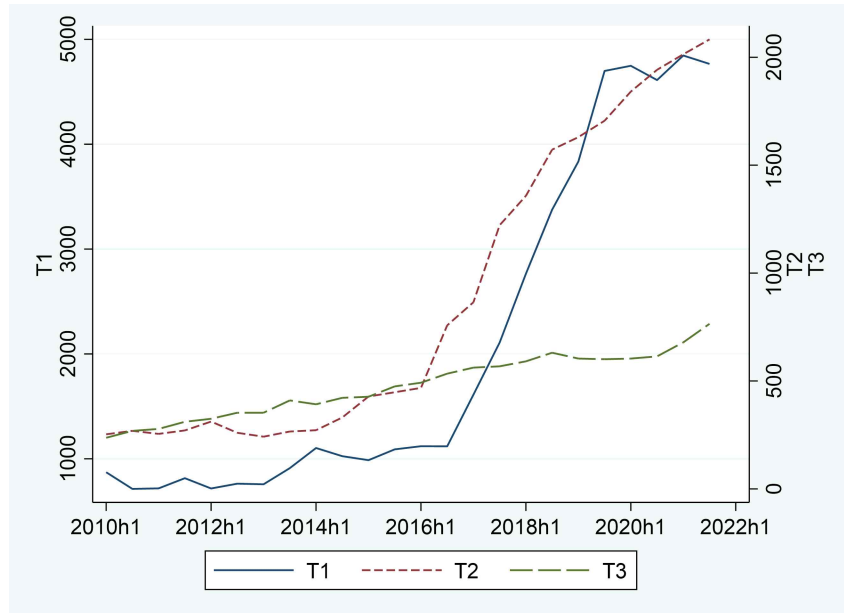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시점(2021년 7월) 전후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신용대출은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출시장 중에서 대출 수요자의 신용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부금융시장에서 신용대출이 감소하고 담보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대부금융사업자들이 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대체하기 위함으로 풀이되며 이는 서민금융연구원 (2019)의 조사 결과에도 잘 반영

8 신용카드리뷰(2023년 3월)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T1 그룹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T2 그룹에서는 최고금리를 20%로 낮춘 이후 신용대출이 소폭 늘어났지만 전체 신용대출의 감소세를 막아낼 만큼은 되지 못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출 상환 유예 등에 따라 기존 대출 잔액이 상당 부분 유지된 데다 T1 그룹의 신용대출이 감소했으므로 여기서 거절된 대출 수요의 일부를 흡수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2019년 말 177.7만 명이었던 전체 거래자 수도 2021년 말에는 112.0만 명으로 65.7만 명(약 37%)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금융사업자들이 신규 대출을 크게 축소할 수밖에 없었음이 보다 뚜렷해진다.

<그림 2> 그룹별(T1/T2/T3) 담보대출 규모 변동 추이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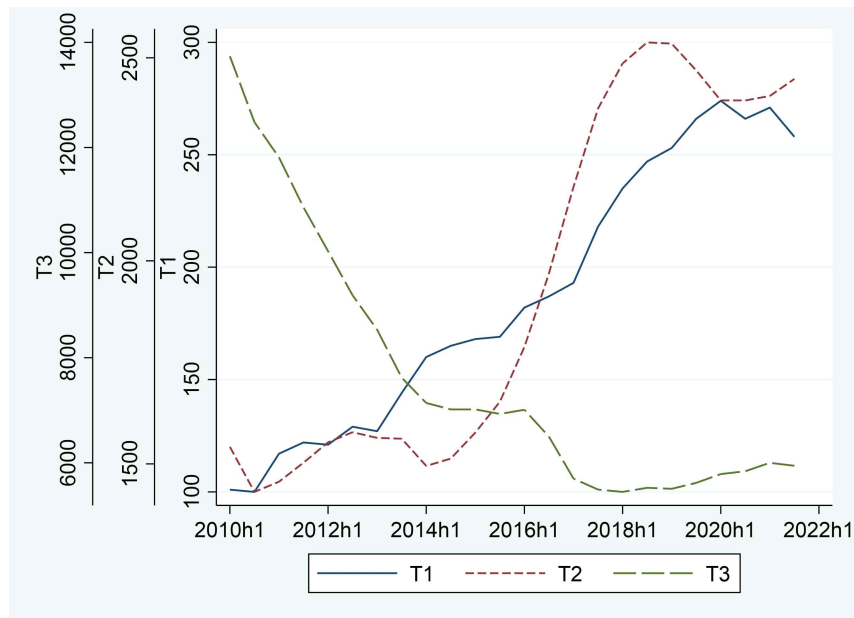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담보대출보다는 주로 신용대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림 3>은 대부 금융사업자 수의 변동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T1과 T2는 대체로 사업자 수가 증가하다가 각각 2020년 상반기와 2019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T3의 경우에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2월에는 최고 금리가 종전 27.9%에서 24%로 인하되었는데 T2의 사업자 수가 감소함에도 T1의 사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T2 그룹에서 T1 그룹으로 이동한 사업자들이 일부 있었고 대형 사업자들이 최고금리 인하의 충격에 조금이라도 더 대응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

된다. 이처럼 그룹별 사업자 수의 변동을 <그림 1>의 신용대출 규모의 변동 추이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부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 대부금융사업자 수 변동 추이

단위: 개



우선 대부금융사업자 수에서 T3 그룹의 경우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T1과 T2는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뚜렷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2018년 상반기의 최고금리 인하 조치와 2020년에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 조치의 예고가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 동안만 하더라도 무려 여섯 차례¹⁾에 걸쳐 최고금리 인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T1 그룹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 조치와 함께 매년 신용대출 규모가 크게 축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의 금리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이며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는 금리가 그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 나타나게 되므로 신용대출이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T1 그룹은 전체 대부금융시장 신용대출의 90%를 넘게 취급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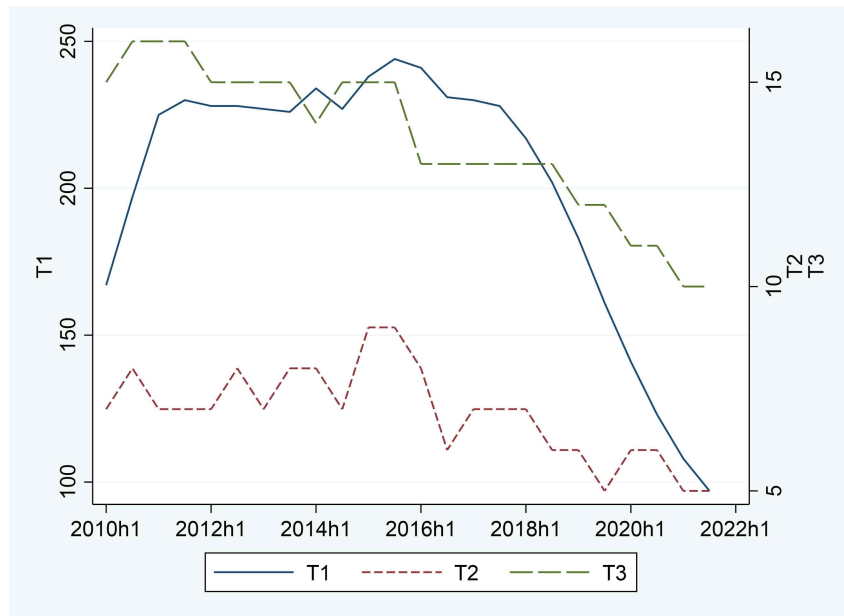
1) 2010년 7월에는 종전 49%에서 44%, 2011년 6월 39%, 2014년 4월 34.9%로, 2016년 3월 27.9%, 2018년 2월 24%, 2021년 7월 20%로 인하

고 있으므로 T1 그룹에서 사업자 수 감소, 신용대출 규모 감소, 거래자 수 감소는 최고 금리 인하가 대부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즉 계속되는 최고금리 인하 조치가 대부금융시장을 위축시켜 오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관련한 논의에서 법인 대부금융사업자(T1과 T2)를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면 법인 대부금융사업자의 수가 증가할 때 반드시 대출 규모가 그에 비례해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공급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 공급의 증가 요인이므로 수요가 일정하다면 균형 수급량, 즉 시장에서 관찰되는 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법인 대부금융사업자의 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도 신용대출 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언가 공급 감소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2018년 상반기의 경우 T1의 대부금융사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T1의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시기에 최고금리 인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우선은 신용대출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점차 사업자 수의 감소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림 4> 대부금융시장의 거래자 수 변동 추이

단위: 만 명



그룹별로 대부금융사업자 수, 거래자 수, 신용대출 규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부 금융시장 내에서도 그룹별로 시장이 차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각 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대부금융시장에 대한 정책 수립에도 이러한 그룹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림 4>에서와 같이 거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공급량의 감소와 신용대출 영업의 중단 등에 따른 공급의 감소로 인해 초래된 결과이지 결코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거래자 수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대출 실적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실제로 대출을 원해도 받지 못하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부금융사업자의 수가 늘어나는 동안에도 신용대출 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통해 대출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수요자가 많을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거래자 수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모두 포함된 수치인데 그래도 엄격하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거래자 수를 구분하자면 <그림 2>에서 담보대출이 증가 추세임을 감안할 때 적어도 신용대출 거래자 수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둘 다 감소했거나 만일 둘 중 하나만 감소했다면 신용대출 거래자 수가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룹별로 살펴볼 때 T1의 대출 거래자 수 변동 추이가 다른 그룹들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여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다시 급격히 감소한 점이 매우 이례적이다. 전체 신용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담보대출에 비해 신용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는 T1 그룹에서 나타나는 거래자 수의 급격한 감소는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금융시장의 신용대출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음을 밝혀 주고 있다.

IV.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 수준 예측

우리나라 대출시장에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자금 공급자로서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다 같이 하나의 대출시장에 속한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의 분류에 따라 서로 다른 시장들로 세분화할 수 있다. 물론 동일한 금융기관 분류 내에서도 대출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시장은 더 세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 대출시장, 저축은행 대출시장, 대부금융시장에 대하여 금리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은행이 정책적으로 정하는 기준금리를 포함하여 금융기관별 주요 대출 금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r_b = 한국은행 기준금리

r = 대부금융시장 신용대출 가중평균 금리

r_1 = 은행 일반 신용대출 금리

r_{1s} = 은행 소액 신용대출(500만 원 이하) 금리

r_2 = 저축은행 일반 신용대출 금리

12 신용카드리뷰(2023년 3월)

r_{2s} = 저축은행 소액 신용대출(300만 원 이하) 금리

<표 2> 기준금리와 대출 금리들 간의 상관계수

$N=16$	r_b	r	r_1	r_{1s}	r_2	r_{2s}
r_b	1					
r	0.7863	1				
r_1	0.9016	0.7366	1			
r_{1s}	0.6976	0.4096	0.7928	1		
r_2	0.6532	0.9091	0.5988	0.1195	1	
r_{2s}	0.7283	0.9791	0.7066	0.3112	0.9629	1

위의 <표 2>에서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가장 큰 상관계수를 갖고 있어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의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피셔 방정식(Fisher equation)이라고도 불리는 명목금리(i_n)와 실질금리(i_r) 간의 관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i_n = i_r + \pi \tag{1}$$

여기서 π 는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며, 이 식은 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근삿값이다. 대출시장의 금리는 보통 명목금리이다. 즉 실제 대출 거래에서 약정하는 금리는 명목금리로서 실질금리에 더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실질금리는 경제성장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은행 일반 신용대출 금리(r_1)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준금리(r_b), 물가상승률(π), 경제성장률(g)을 설명변수로 하는 식 (2)와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고, <표 3>의 추정 결과를 얻었다.

$$r_1 = \beta_0 + \beta_1 r_b + \beta_2 \pi + \beta_3 g + \epsilon \tag{2}$$

분석 결과 경제성장률은 큰 영향 요인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R제곱의 값도 0.94로 어느 정도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 <그림 5>는 분석 대상 기간 중 실제 대출 금리와 식 (2)로부터 추정된 회귀식을 이용하여 추정된 금리를 나타내고 있다. 높은 설명력으로 인해 두 대출 금리의 변동 추이가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하반기의 경우 기준금리 0.88%, 물가상승률 1.38%에 실제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4.48%였는데 같은 시기에 회귀식을 이용하여 예측한 값이 4.08%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소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라 은행 대출시장 금리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는 전혀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표 3> 은행 신용대출 금리(r_1)의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계수	표준오차	P값	95% 신뢰 구간	
기준금리	1.531	0.100	0.000	1.322	1.740
소비자물가상승률	0.547	0.141	0.001	0.252	0.842
경제성장률	-0.076	0.121	0.535	-0.330	0.177
상수(β_0)	2.034	0.204	0.000	1.608	2.460

R-squared = 0.9440
 Durbin-Watson d-statistic(4, 23) = 1.7525
 Mean VIF = 1.12

<그림 5> 은행 신용대출 금리 추정 결과



한편 은행 대출시장에 적용한 회귀분석 모형을 대부금융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경우 그 추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은행 대출시장에서의 추정 결과와 다른 점은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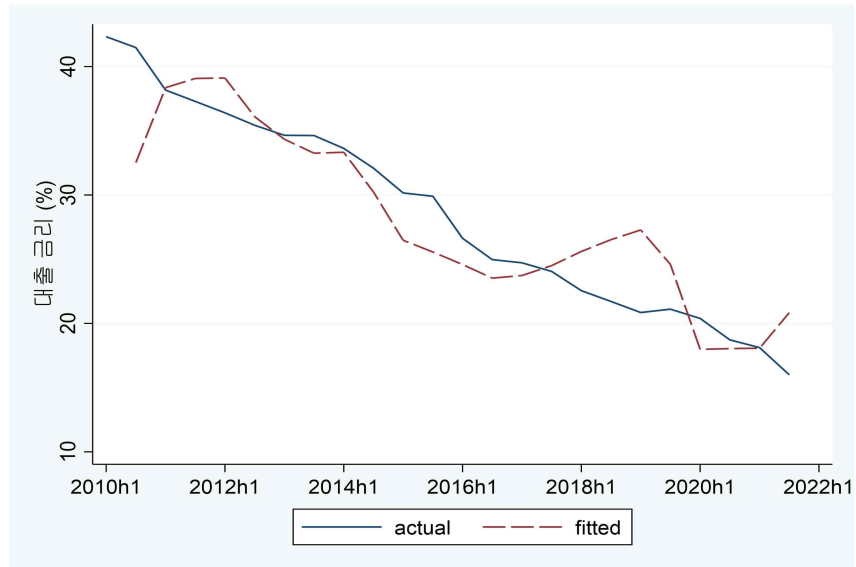
성장률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의 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의 사후 검정에서 오차항의 자기상관을 암시하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산출되었다. 중요한 설명변수라 할 수 있는 기준금리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까지 의심할 만한 효율성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보수적인 예측을 위해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을 이용하는 데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금융시장의 실제 금리와 <표 4>의 회귀분석 결과(결과 1)에 따른 추정 금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표 4> 대부금융시장 가중평균 금리(r)의 회귀분석 결과 1

설명변수	계수	표준오차	P값	95% 신뢰 구간	
기준금리	7.719	0.956	0.000	5.717	9.721
소비자물가상승률	0.132	1.349	0.923	-2.691	2.956
경제성장률	0.268	1.158	0.820	-2.156	2.691
상수(β_0)	13.662	1.947	0.000	9.588	17.737

R-squared = 0.7954
 Durbin-Watson d-statistic(4, 23) = 0.7604
 Mean VIF = 1.12

<그림 6> 대부금융시장의 금리 추정 결과 1



한편 <표 4>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변동에 따라 대부금융시장의 금리 수준을 예측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경제성장률은 대상 기간 동안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만일 기준금리가 3%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라고 한다면 추정된 회귀식을 이용하여 대부금융시장의 금리는 무려 37.7%로 예측된다. 추정 결과 유의한 계수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을 적용하더라도 26.7%이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물가상승 불안도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부금융시장에는 금리의 상승 압력이 작용하겠지만 최고금리 규제로 인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른 대부금융시장 금리 예측

구분		기준금리				
		1.0	2.0	3.0	4.0	5.0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21.7	29.4	37.2	44.9	52.6
	2.0	21.8	29.6	37.3	45.0	52.7
	3.0	22.0	29.7	37.4	45.1	52.9
	4.0	22.1	29.8	37.5	45.3	53.0
	5.0	22.2	30.0	37.7	45.4	53.1

대출시장의 적정 금리 수준을 추정하는 회귀식에서 대출 잔액 변수를 고려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물론 엄밀히 시장에서 대출 수요나 공급을 추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과 수량은 일정한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수량이 모두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감소하고 수량은 증가한다. 그동안 시장의 가격과 수량의 변화를 주도해 온 요인이 무엇인지 짐작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은행은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통계가 확보되지 않아 대부금융시장에 대해서만 대출 잔액 변동률(l)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적용해 보기로 한다.

$$r = \beta_0 + \beta_1 r_b + \beta_2 \pi + \beta_3 g + \beta_4 l + \epsilon \tag{3}$$

식 (3)에 따른 추정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4>의 결과에 비해 추정 회귀식의 설명력이 높고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으나 음수로 나타나 있다. 대출 잔액 변동률의 계수는 양수이며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그동안 최고금리 규제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 잔액이 축소된 결과가 반영된 것이며 아울러 이 시장에서 늘어나는 대출 수요를 충족시키려

면 일정한 금리 상승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고금리 이상으로의 금리 상승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잠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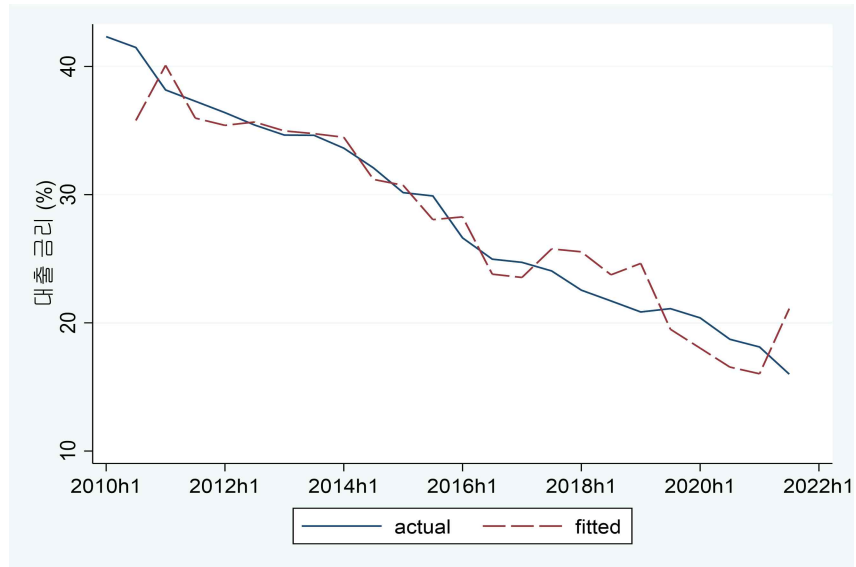
2021년 하반기에 대부금융시장의 가중평균금리는 16.0%였으나 두 회귀 모형에 의한 추정치는 각각 20.8%와 21.1%였다. 모두 현행 최고금리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물론 회귀 모형의 추정치는 오차를 가질 수 있지만 시장의 적정 금리 수준이 다른 경제 변수의 영향으로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표 6> 대부금융시장 가중평균 금리(r)의 회귀분석 결과 2

설명변수	계수	표준오차	P값	95% 신뢰 구간	
기준금리	6.480	0.744	0.000	4.916	8.044
소비자물가상승률	-0.930	1.000	0.365	-3.031	1.171
경제성장률	-0.622	0.857	0.478	-2.423	1.179
대출 잔액 변동률	0.344	0.079	0.000	0.177	0.510
상수(β_0)	16.883	1.584	0.000	13.555	20.212

R-squared = 0.8999
 Durbin-Watson d-statistic(5, 23) = 1.5977
 Mean VIF = 1.29

<그림 7> 대부금융시장의 금리 추정 결과 2



V. 결론과 제언

대부금융시장은 우리나라 제도권 대출시장의 가장자리 영역에 속해 있고 이 시장을 넘어서면 그야말로 사금융의 영역이다. 물론 시장 규모만으로는 그 중요성이 크지 않을 지라도 우리 사회의 저신용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들이 수요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최철 (2018)에서도 저소득의 경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욱 필요하고 정책이나 규제의 설계와 집행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대부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주요 현황과 몇 가지 특징적인 측면들을 소개하였다. 우선 대부금융사업자는 그 규모에 따라 세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자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 그룹(T1)에 비교적 소수(2021년 말 기준으로 258개)의 대부금융사업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 신용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의 비중이 더 높은 편이지만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대출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다른 그룹(T2와 T3)에 속한 다수(2021년 말 기준으로 각각 2,448개와 5,944개)의 대부금융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의 비중이 더 크다. 즉 신용대출을 매우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 위험은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김주일, 2017) 최고금리 규제 하에서 저신용 대출 수요자에 대하여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에 집중하는 것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더 유리한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또한 T1 그룹의 경우에도 신용대출 잔액과 거래자 수는 모두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 이 그룹의 사업자 수가 늘어나는 시기에도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결코 대출 수요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공급량의 감소 또는 신용대출 영업의 중단 등에 따른 공급의 감소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는 대부금융시장의 금리 수준이 주요 경제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 회귀 모형을 설정하고 2010년 상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의 기간 중 대부금융시장 통계 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실질금리나 물가상승률이 금리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그리고 대출 잔액 변동률을 통해 금리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은행 대출시장이나 대부금융시장 모두 기준금리가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은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 수준 예측이 본 연구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는데 2021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당시 기준금리가 1.00%였음에도 연구 모형이 예측한 금리는 모두 현행 최고금리인 20%를 상회하였다. 2023년 1월에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0%로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대부금융시장에서는 최고금리 규제로 인해 이전보다도 더 큰 제약을 받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대부금융사업자들이 더 이상 신용대출을 취급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영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시장을 떠나는 사례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결국 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저신용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자들에게는 대출 기회의 상실로 이어져 금융포용의 정책 목표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이며, 자금이 절박한 일부 수요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더 큰 불이익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최고금리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단기 소액 대출시장에 대해 특별히 금리 상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시장 상황을 감안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고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를 다소 여유를 두고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금융시장이 처음 제도권으로 편입되던 시기에는 공급자의 과도한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최고금리 규제가 효과적이었을 수 있지만 이 시장이 점차 안정화를 이루고 발전을 거듭하는 단계에서 과연 최고금리 규제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날 순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시장이 완전무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그만큼 시장이 ‘자생적인 질서’로서 경제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이나 정책도 시장을 거스르지 않고 그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한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경제에 관한, 특히 금융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많은 현안과 과제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에 규범화되어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특정 이해당사자의 이익만을 고려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과학을 통해 그 섭리를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사회에 형성된 것이지만 결코 인위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시장에 대해서도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적인 분석 결과에서 미흡하거나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연구 과제들은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더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고도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경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에 걸맞게 대부금융시장에서도 상생과 지속 가능성의 해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종구, 임호성. (2015). 우리나라 대출 수요와 공급의 변동요인 분석 (BOK 경제연구 2015-17).
- 구정환, 이규복, 김석기. (2016). 국내 서민금융 현황 및 개선 방안: 수요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KIF 금융분석보고서 2016-03).
- 김미루. (2022).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 방안 (KDI FOCUS).
- 김대규. (2017). 금리 상한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대부금융협회.
- 김주일. (2017). 신용위험과 대출이자율과의 관계. *신용카드리뷰*, 11(2), 31-54.
- 박덕배. (2018). 최고금리가 대부업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대부금융협회.
- 서민금융연구원. (2019). 대부업·사금융시장 이용자 및 업계 동향 조사 분석. 서민금융연구원.
- 이민환, 한재준. (2013). 한일 대부업 시장의 금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 *금융연구*, 27(3), 1-28.
- 이수진. (2018).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KIF 금융리포트 2018-02).
- 최철. (2018). 우리나라 가계의 대출 수요와 신용 제약. *신용카드리뷰*, 12(3), 23-43.
- 최철. (2020). 포용적 금융과 최고금리 규제의 역설. *소비자문제연구*, 51(3), 161-179.
- 홍희주, 김상봉. (2018). 최고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 금융기관 이용자의 배제 규모에 대한 연구. *신용카드리뷰*, 12(1), 29-50.
- Hodgman, D. (1960). Credit risk and credit ration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4(2), 258-278.
- Jaffee, D., & Modigliani, F. (1969). A theory and test of credit rationing. *American Economic Review*, 59(5), 850-872.
- Stiglitz, J., & Weiss, A. (1981).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1(3), 393-410.

A Study on Interest Rate Ceilings in South Korea's Micro Lending Markets

Chul Choi*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nsumer Economic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South Korea's micro lending markets are subject to interest rate ceilings. This regulation has been tightened all the time while interest rate levels in the markets have on the whole maintained a downward trend. The highest interest rate continued to be cut repeatedly and it was finally lowered from 24% to 20% (per annum) in July 2021. Recently, however, interest rates have turned to an upward trend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e having difficulty in raising funds. Accordingly, it is natural that interest rates rise. Since micro lending markets are most directly affected by the regulation and there is no way that interest rates exceed the upper limit, micro lending providers are greatly restricted in their businesses. Moreover, the demand for loan cannot be met in the markets. If this situation continues, micro lending markets will shrink further and their sustainability will be seriously threatened.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South Korea's micro lending markets and made estimations of appropriate interest rates according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such as an increase in the base rate. For example, if the base rate of the Bank of Korea is 3.0% per annum, the lowest predicted interest rate in the markets is 26.7%, far exceeding the current ceiling of 20.0%. Although lowering the ceilings is based on a good intention to alleviate the interest burden of borrowers, it entails excessive control over the markets which reduces loan opportunities through the markets and brings vulnerable borrowers into unfavorable outcomes that they would have avoided if possibl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set a ceiling compatible with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or to make it higher with an allowance.

Keywords: Micro lending market, Interest rate ceiling, Financial inclusion, Micro lending service provider, Unsecured loan

<최초 투고일: 2022년 12월 31일>, <수정일: 2023년 3월 26일>

<게재 확정일: 2023년 3월 27일>

* Address: 1001 Queen Sunheon Building, 100 Cheongpa-ro 47-gil, Yongsan-gu, Seoul 04310, Korea. E-mail: choichul@sookmyung.ac.kr; Tel: +82-2-2077-7958